

## 90년대 한국경제는 어떻게 불평등을 줄였을까

[새로운 사회 2013] (1) 한국경제 20년 다시 보기 ①

2012.03.27 | 새로운사회를여는 연구원 | edu@saesayon.org

### 목차

1. 한국경제도 자본주의 황금기가 있었다
2. 소득상승이 경제발전 동력이 되다
3. 불평등이 가장 낮았던 시절
4. 높은 저축과 안정된 부동산 시장
5. 잠깐 동안 존재했던 내수 기반 경제의 가능성

새사연은 2013년 체제를 만들기 위해  
한국사회에 필요한 진보대안정책을 담은 새 책을  
2012년 5월에 출간할 예정입니다.  
이 글은 새 책의 일부분입니다.

**편집자 주**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장기침체 국면으로 이어지면서 30년 동안 세계를 지배했던 신자유주의의 퇴조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경제위기의 여파로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이 악화되자 한국사회에서는 전례 없는 보편 복지 요구가 확대되고 있고 경제 민주화의 요구로 발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2012년 양대 선거를 맞아 정권교체 요구가 거센 가운데 다양한 사회개혁 의제가 정책 공약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사회가 정말 2013년 체제라고 불릴만한 사회 대개혁을 제대로 추진하자면, 강력한 경제개혁 전망을 갖고 복지국가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이 새사연의 문제의식이다.

이에 새사연은 우리사회에 필요한 시대적 가치와 비전, 새로운 경제모델과 성장모델, 총체적 경제개혁, 보편복지를 망라하는 정책을 모아 2012년 5월 중 단행본 출간을 계획하고 있다. 출판될 원고 가운데 일부를 새사연 회원들과 미리 공유하고자 <새로운 사회 2013>이라는 기획을 마련했다. 회원과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기대한다.

## 1. 한국경제도 자본주의 황금기가 있었다

선거를 앞두고 심각한 소득 불평등이 문제라고 한다. 무너진 중산층을 다시 복원해야 한다는 소리도 높다. 양극화 해소를 위해 보편복지 정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경제적 불평등을 그대로 두고 복지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천문학적인 재원이 문제다.

지금의 문제는 재벌 중심의 수출경제로부터 기대했던 적하효과가 소멸한 탓이라는 지적이 공감대를 얻고 있다. 그래서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모든 정당들이 내수기반 경제를 회복해야 한다고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내수를 살리려면 민간소비가 회복되어야 한다. 민간소비는 국민들의 호주머니에 소득이 없으면 살아날 수 없다. 결국 소득 불평등과 이미 커질 대로 커진 부채가 문제다. 도대체 내수기반을 회복시킬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이 없어 보인다.

우리경제에서 ‘소득 상승을 동력으로 한 내수기반 경제’가 가능할까? 이론에 불과할 뿐 우리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일이 아닐까? 그렇지 않다. 역사적 경험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불과 15년 전까지만 해도 임금과 소득이 꾸준히 오르고, 불평등은 줄어들고, 소비와 투자는 활기차게 이뤄졌다. 정말이다. 한국경제도 그렇게 잘 나가던 시절이 있었다. 그 시절을 그리워하며, 또 지금을 안타까워하며 한국경제의 지난 30년을 돌아보자.

1987년과 1997년은 한국경제를 돌아볼 때 꼭 짚어야 할 두 번의 큰 분기점이다.<sup>1)</sup> 먼저 1987년이 가져다 준 한국경제의 황금기를 살펴보고, 이후 1997년 외환위기로 인해 한국경제가 어떻게 망가졌는지를 살펴보자.

1987년 한국경제는 3저 호황이라는 매우 유리한 대외 경제적 환경을 맞는다. 1985년 열린 선진국들의 플라자 합의 덕분이다. 또한 6월 민주화 항쟁이 일어나 민주화의 분위기가 사회적으로 확산되었고, 뒤이은 7~9월 노동자 대투쟁으로 노동조합 결성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며 임금인상 요구도 높아졌다. 이처럼 내외적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요인들이 작용하면서 1987년에서 1996년 동안의 한국경제는 그 이전 시기와 확연히 다른 거시경제 지표를 기록한다. 물론 그 이후 시기와의 확연히 다르다. 이 시기는 한국경제의 전 역사를 통틀어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그나마 긍정적인 모습이 나타났던 시기다. 한국 자본주의 경제사에 유일했던 황금기였다.

### 3저 호황과 한국경제

1980년대 초반에 있었던 3저 호황은 저금리, 저달러, 저유가를 의미한다. 덕분에 1986년부터 1988년까지 연속 3년 동안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10%를 넘어서는 기록을 달성했다. 3저 호황은 한국경제에 어떻게 도움이 되었나?

①저달러 : 플라자 합의로 인해 일본 엔화의 가치가 절상되면서 상대적으로 원화의 가치가 절하되었다. 일본 제품에 비해 우리 제품의 가격이 싸져서 수출에

1)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역시 향후 한국사회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분기점으로 기록될 지도 모른다. 금융위기로 인해 복지담론이 전사회적으로 확고하게 뿌리내렸으며, 경제민주화와 노동민주화가 개혁과제로 부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이 과제들이 얼마나 실현되느냐가 중요한 변수로 남아있다.

유리해진 것이다. 덕분에 우리 역사에서 최초로 경상수지 흑자를 달성하게 된다.

②저금리 : 당시 석유과동의 여파로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고자 각국 정부가 금리를 인하하면서 국제금리가 하락했다. 덕분에 우리나라가 갖고 있던 외채의 금리도 줄어들었고 경상수지 호전에도 도움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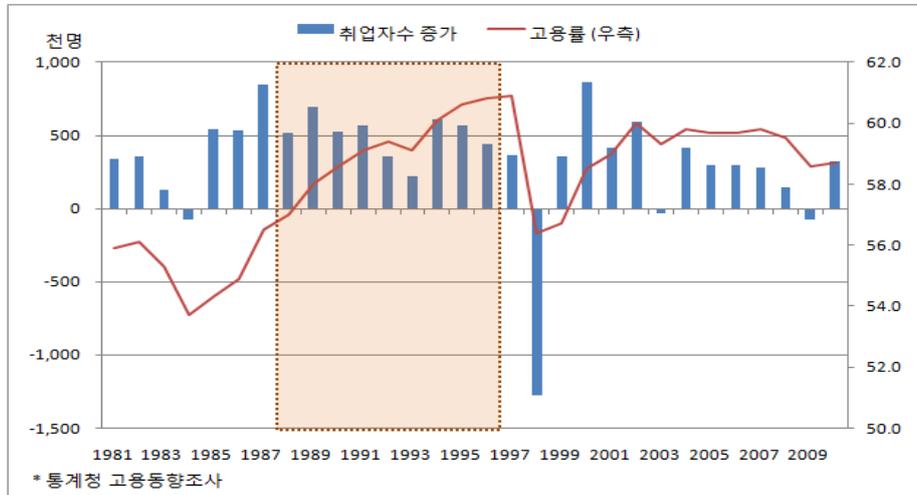
③ 저유가 : 1985년 OPEC 회원국이 기존의 고정 유가제를 폐지하고 경쟁체제로 돌아서면서 유가가 하락했다. 이는 국제 원자재 가격 안정으로 이어져서 수출품 생산을 위해 원자재를 수입하는 한국으로서는 유리한 조건이 되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1987년 이후 10년 동안의 흐름이 이어졌다면 지금 우리 앞에 놓인 한국경제의 굼직한 난제들은 상당부분 해결되었을 것이라는 점이다. 당시 노동자의 임금과 소득은 가장 빠르게 증가했고, 노동소득 분배율이 개선되면서 소득 불평등 정도가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저축률을 자랑하면서 국민경제의 투자 잠재력을 키웠고,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시장은 큰 변동 없이 일정수준을 유지했다. 중산층이 두터워지면서 민간 구매력이 향상되고 내수기반은 탄탄해졌다. 이를 바탕으로 재벌 대기업은 자본과 기술을 축적하여 글로벌 기업으로 뻗어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자.

## 2. 소득상승이 경제발전 동력이 되다.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노동조합 결성이 폭발적으로 확대되었다. 1989년에는 노동조합 조직률 20%, 조합원수 200만 명으로 정점에 올랐다. 2011년 기준 10% 밑으로 내려간 노동조합 조직률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이다.

[그림1] 1990년대 고용률과 취업자 수 증가 변동 추이



노동조합이 활성화되면서 유례없는 노사 분류와 임금인상 요구가 있었다. 하지만 그림에도 불구하고 당시 연 평균 실질 경제성장률이 8.3%였을 정도로 상당히 높은 경제성장을 지속했다. 2001년에서 2010년까지 평균 경제 성장률은 4.2%였다. 이와 비교하면 당시에는 확실히 고성장 기조가 이어진 반면 2000년대에는 저성장 기조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고성장이 이어지면서 일자리는 매년 50만 개 가량 늘어났고, 고용률<sup>2)</sup>도 매우 가파르게 상승하였다([그림1] 참조). 1994년에서 1996년 동안에는 역사상 최고치인 고용률 61%에 근접했다. 최고의 일자리 창출 시기였다. 반면 외환위기 이후에는 고용률이 급격히 하락하여 60% 밑을 맴돌았으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더 추락했다. 아울러 이 시기는 노동유연화가 사회적으로 확대되기 전이어서 비정규직과 같은 고용불안도 상대적으로 적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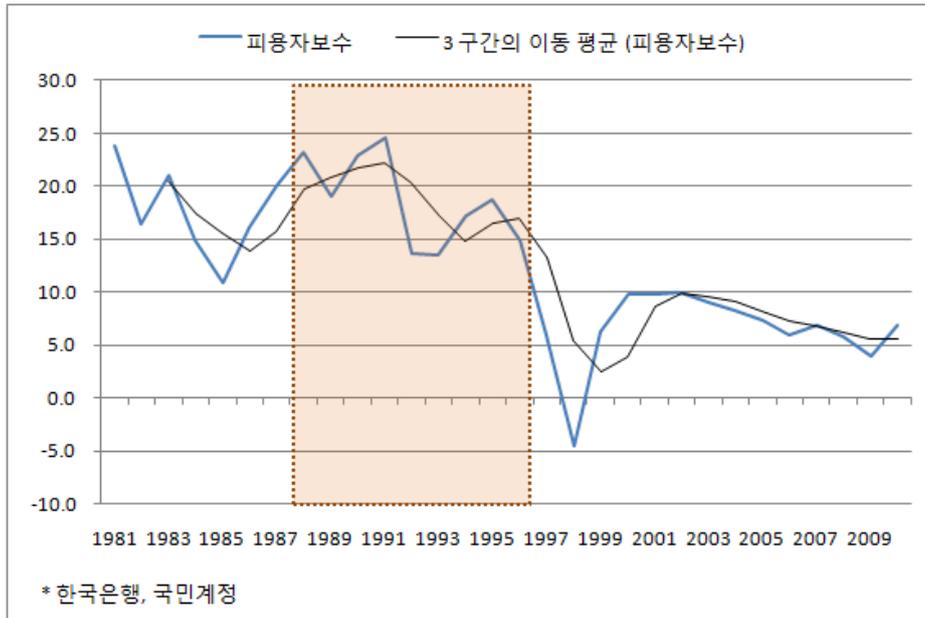
일자리가 늘어나니 당연히 노동자 임금과 가계 소득이 안정적인 상승세를 이어갔다. 한국은행이 집계하고 있는 명목상 피용자보수가 당시에 매년 15~2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점이 이를 입증해준다([그림2]참조).

임금상승에 따라 기업의 생산원가나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중도 높은 수준

2)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 중 취업자의 비율을 말한다.

을 기록하게 된다. 당시 전 산업 기준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이 12~14%까지 달했다. 반면 2000년대에는 10% 전후로 하락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기업들이 인건비 부담으로 적자행진을 했던 것도 아니었다. 경제 성장의 과실이 충분했으며, 이를 노동자와 기업이 어느 정도 나눠 갖는 양상이었다.

[그림2] (국민 처분가능소득 중) 피용자 보수 증가율 변동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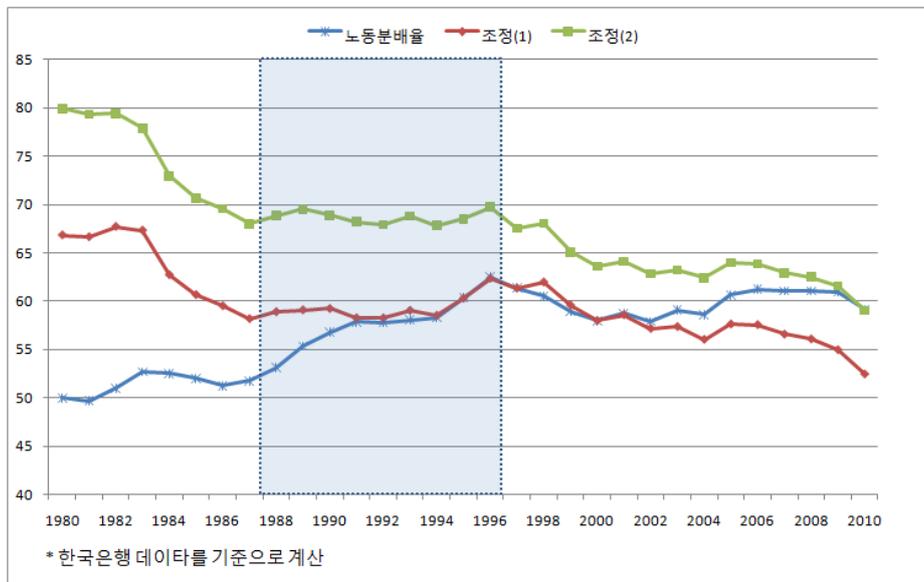


요약하자면 1987년 이후 10년은 ‘노동조합운동 활성화 → 취업자 수 증가 → 고용률 증가 → 임금 상승’이라는 선순환의 연쇄적 상승작용이 바람직하게 작동했던 시기다. 특히 이 시기의 경험은 당시의 노동운동 활성화와 노동 민주화가 경제 성장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수 기반을 강화시키면서 경제의 선순환을 높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역사적 증거이다. 반면 2000년대는 ‘노동조합운동 약화 → 취업자 수 증가세 약화 → 고용률 하락 → 실질임금 정체’의 악순환을 겪고 있다. 매우 대조적이다.

### 3. 불평등이 가장 낮았던 시절

노동자 임금이 상승하고 기업의 이익 중 임금으로 배분되는 몫이 늘어나니 당연히 노동소득 분배율<sup>3)</sup> 또한 가장 빠른 속도로 개선되었다([그림3]참조). 임금 노동자의 절대 숫자가 계속 늘어났던 것을 고려하여 재계산한 [그림3]의 조정 노동소득 분배율(1)<sup>4)</sup>을 보면 2000년대와의 차이가 더욱 확연하다. 자영업자 소득 감소까지 감안한 조정 노동소득 분배율(2)<sup>5)</sup>를 보면 격차는 더 커진다.

[그림3] 노동소득분배율의 변화추이



노동소득 분배율이 개선되면서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인 지니계수도 1990년대 초반에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외환위기를 분기점으로 2000년대에 지속적으로 지니계수가 상승했던 것과 확연한 대조를 보인다([그림4]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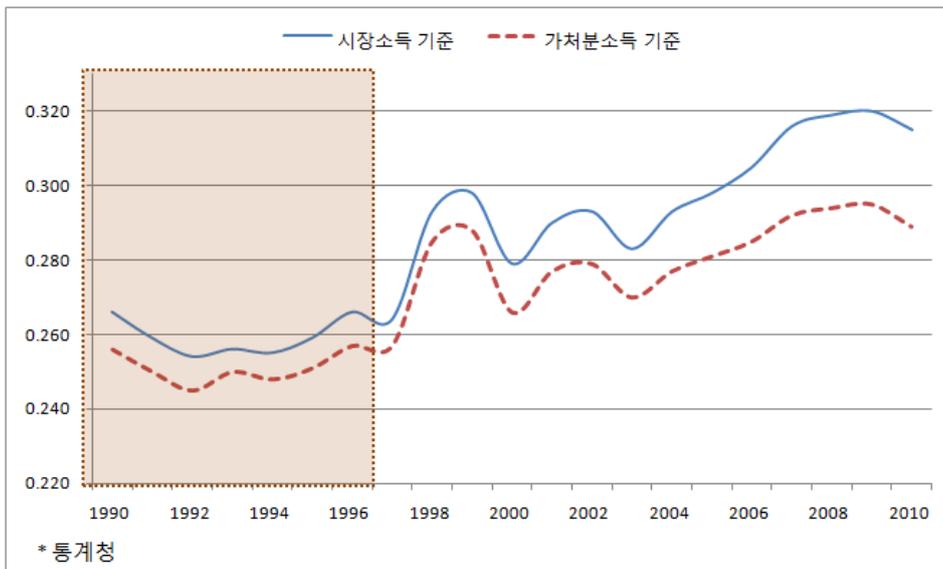
3) 국민소득 중 피용자보수의 비중. 국민소득은 영업잉여와 피용자보수로 구분되는데 영업잉여는 기업이 이윤으로 돌아가는 몫이고, 피용자보수는 노동자 임금으로 지급되는 몫이다. 노동소득 분배율이 커질수록 사회의 불평등이 완화될 수 있다.

4) 기준년도 임금근로자 비중 대비 비교년도 임금근로자 비중을 곱해준 것이다. 임금근로자 비중에 따라 노동소득 분배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1990년 59.2%, 1996년 62.4%, 2001년 58.6%, 2010년 52.5%를 기록했다.

5) 노동자뿐 아니라 자영업자까지 고려한 것으로 자영업자가 평균 피용자보수만큼 소득을 받는다고 가정하고 계산한 것이다. 자영업자가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많을 경우 과대평가의 위험이 존재한다. 1990년 68.9%, 1996년 69.7%, 2010년 59.0%를 기록했다.

결국 이 시기는 상대적으로 불평등 정도가 완화되고 중산층이 두터워져갔던 시기였다. 2010년대 현재 시점에서 중요한 사회목표가 불평등 완화와 두터운 중산층 만들기라면 그 목표에 가장 근접했던 시기였던 셈이다.

[그림4] 지니계수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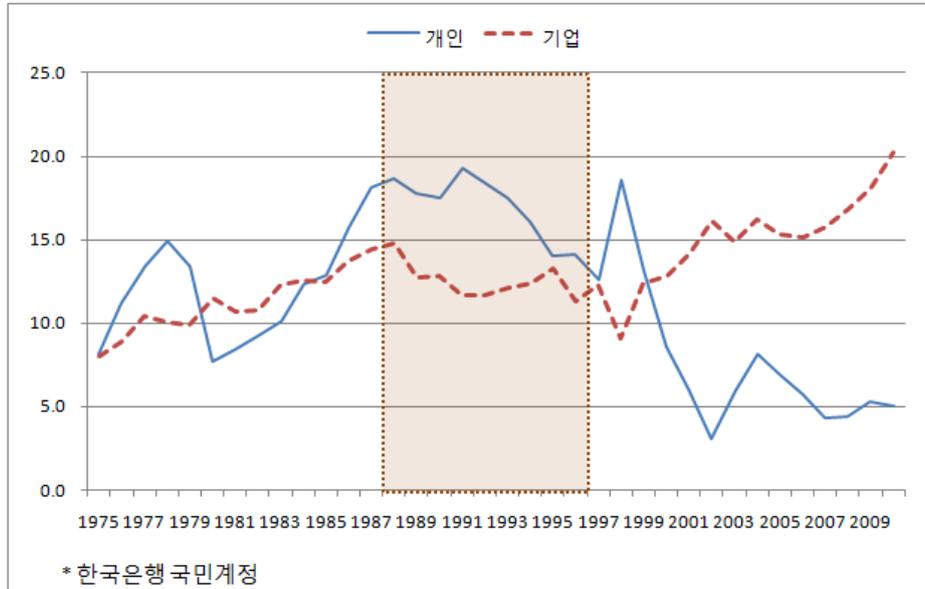
#### 4. 높은 저축과 안정된 부동산 시장

소득 상승에 힘입어 가계의 저축률 또한 15~20%를 유지하면서 기업 저축률을 크게 상회했다. 가계 부채는 1996년까지 가계 신용잔액 기준 175조 원이었다. 당시에는 가계부채가 아니라 기업부채가 문제였다. 현재 개인 순저축률은 2011년 기준 3.8%에 불과하여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며, 가계부채는 900조 원을 넘어섰다. 반면 기업들은 부채비율을 빠르게 축소하고 내부 현금자산을 늘리면서 저축률을 가파르게 높여가고 있다([그림5]참조).

부동산 시장은 1990년대 초반 잠깐 과열되었지만 대체로 큰 상승 없이 일정한 가격 기조를 유지했다. 전세 값이 완만하게 상승하는 정도였다. 국민들이 부동산이나 주식 가격 등락 소식에 가슴 졸이며 지낼 일이 없었다. 하지만 외환위기 이후 한국 부동산 시장에는 상당한 거품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외환위기 이후 부동산 시장이

1999~2003년, 그리고 2005~2006년 두 번에 걸쳐서 큰 폭으로 상승한 결과 서울 지역 기준 아파트 가격이 평균 두 배 이상 올랐다.<sup>6)</sup>

[그림5] 개인과 기업의 명목 총 저축률 변동 추이



주식시장도 비슷했다. 1980년대 말과 1993년 전후 두 차례에 걸쳐 일시적으로 폭등하는 현상을 보이기는 했지만 주가는 대체로 600~1000포인트 사이를 오갔다. 하지만 2004~2008년 금융위기 시기에 기록적인 속도로 상승하여 2000포인트를 돌파하며 큰 폭의 변동성을 보였다. 결국 당시는 실물경제에서 근로소득이 꾸준히 상승하며 저축도 늘었으며, 자산시장 변동은 안정적이었다. 오늘날 부풀어 오른 부동산 가격과 금융부채에 조마조마해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부러운 시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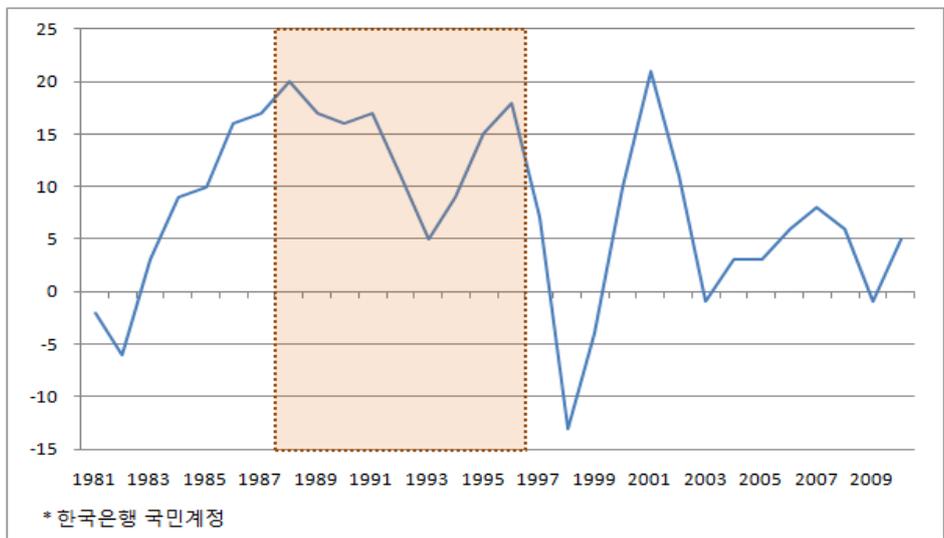
### 5. 잠깐 동안 존재했던 내수 기반 경제의 가능성

국민들의 소득과 저축이 늘어나면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까? 국민들은 생활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더 활발한 소비활동을 한다. 기업들은 국민들의 저축을 기반으로 더

6) 국민은행 주택 통계에 의하면 1999년 1월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가 35.7이었는데 비해 2010년 말 기준 지수는 100.3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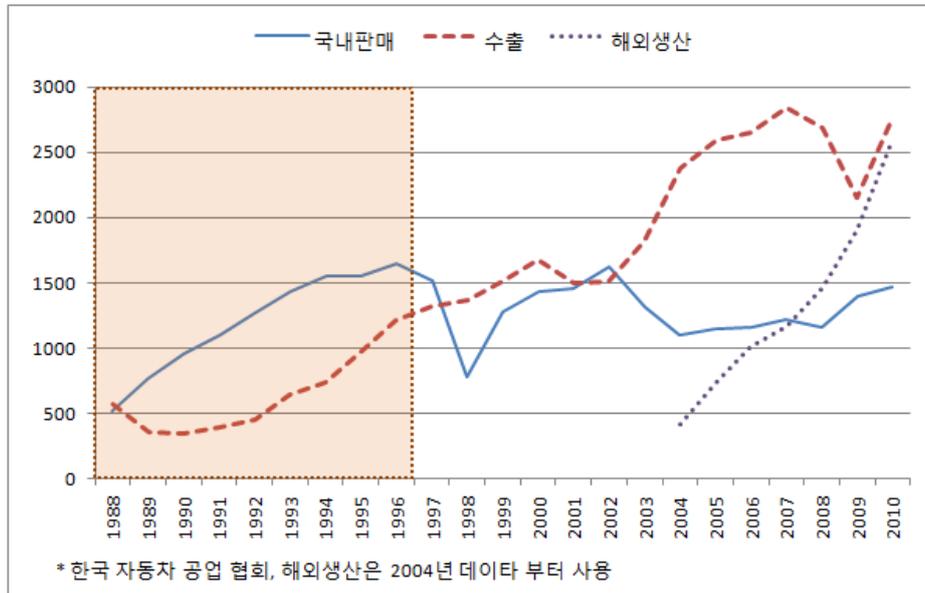
용이하게 투자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국내경제 내부에서 소비와 투자의 잠재력이 커지는 것이다. 실제로 1987년 이후 10년은 여전히 수출 비중이 크기는 했지만 민간 소비지출을 통한 내수의 성장 기여도가 높았던 시기였다. 이후 2003년 신용카드 대란 직전에도 소비가 늘어났지만, 이는 소득 상승에 의한 것이 아니라 부채 증가에 의한 것이었다.

[그림6] 실질 설비투자(3년 이동평균)증가율 변동 추이



국내 민간 소비가 팽창하자 기업들은 국내 설비투자를 더 공격적으로 확대했다. 1987~1996년 동안 평균 설비투자 증가율은 13.1%였는데 이는 2001~2010년 동안 3.8%에 불과했던 것과 선명하게 대조를 이룬다([그림6]참조). 주목할 것은 ‘국민의 소득 상승 → 구매력 상승 → 민간소비 증가 → 내수시장 팽창’의 선순환은 국내 재벌 대기업에게 엄청난 도약의 계기로 작용했다는 점이다. 확대된 내수시장에 대한 지배력을 기반으로 주요 재벌 대기업은 활발하게 자본축적과 기술축적을 이뤘다. 그 결과 1980년대까지 조립가공업 수준에 머물렀던 것에서 벗어나 자동차, 반도체, 전자 등에서 일정 수준 자체 기술력을 확보하면서 고부가가치의 산업으로 이동했다. 중화학공업 중심의 산업구조도 첨단 산업 방향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이 시기 일본경제가 장기 침체에 접어들면서 상대적으로 한국 재벌 대기업에 유리한 경쟁여건이 조성되기도 했다.

[그림7] 자동차 업계의 국내 판매, 수출, 해외생산 변화 추이



이 시기 내수시장 확대를 확실히 보여주는 사례가 자동차산업이다. 자동차 내수 규모가 수출을 앞질러 나가면서 국내적 호황을 누렸던 유일한 시기였다. 반면 2000년대 한국 자동차산업은 수출 중심이었으며, 2000년대 후반에는 아예 생산기지까지 해외로 옮겨서 해외 생산 후 해외 판매한 것이 수출 규모와 비슷한 수준에 이르렀다([그림7]참조). 이는 2000년대 재벌 대기업의 성장이 국내 경제의 성장과 단절되어 있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이기도 하다. 가전이나 휴대폰, 석유화학 등 대부분의 수출산업들이 유사한 경로를 밟았다.

우리나라 재벌 대기업의 성장은 1987년 이후 10년 동안의 내수시장 확대, 이에 대한 독과점적 지배력 확보가 없었다면 불가능했다. 현재 그들의 글로벌 도약은 결코 혼자 이루어낸 것이 아니다.

이처럼 고용안정과 소득 상승, 낮은 부채, 높은 저축, 안정된 자산시장, 내수경제의 기반 형성, 불평등 완화, 중산층 확대라고 하는 2010년대 우리 경제 사회의 중요 과제들은 1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매우 실현 가능한 목표들이었다. 그러나 이 모든 긍정적 결과들은 외환위기로 인해 통제로 무너져 내렸다. 🏠